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와 청렴실천 다짐 공익직불금 감액제로화 총력

김관영 지사·노조위원장, 청렴실천 공동서약식 개최... 청렴문화 확산 의지 다져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청렴실천 공동서약식'을 열고 전 직원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청렴실천 공동서약서'를 낭독하며, 모든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는 청렴 전북 실현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은 실국장급 간부를 포함한 각 직급별 대표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입사 8개월 차 새내기 설계회 주무관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라는 미세 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와 같다"

며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서약에는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및 이권개입·알선 배제 △공품·향응 수수 금지 △의무 간섭 배제 등 공직자로서 실천해야 할 청렴 항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라며 "청렴 실천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전북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며, 모든 공직자가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청렴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실천 공동 서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직급별 대표가 '청렴실천 공동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청년농·행정·농관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준수사항 이행률 제고 위한 전북형 '직불감액 ZERO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와 함께 공익직불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중요성 확산 및 준수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1,114건의 감액 사례가 발생해 약 2억 7,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도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25일 14개 시군, 농관원 전북지원, 전북 4-H 연합회 등 협의체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했으며, 직불감액 캠페인 실시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 주요 공동 실천 활동으로는, 먼저,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농지현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의 이행률을 높



이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준수사항 중 영농·생활 폐기물 적정 처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이 곧바로 직불금 지급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신청 안내에도 힘을 기울인다. 폐경지를 포함하거나 이웃 농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적합 면적이 포함되면 직불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농관원은 부적합 농지를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변경등록 기간 내 수정 신청을 유도하는 등 직불금 감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관 협력은 단순한 준수사항 실천 독려를 넘어 청년농이 중심이 되어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의 실천 주체가 되는 구조로 나아가"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2024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서 A등급 획득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서'에서 82.45점을 획득하며 A등급을 달성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현황, 관련 인력·조직 구성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1426개 기관 대상 평가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노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북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하는 협의체 활동 △부서장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시험 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개인정보과일 파기 주간 운영 △개인정보관리사(CPPG) 취득을 통한 관

리 직원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전담 신규직원 채용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평가에서 D등급이었던데 반해 1년여 만에 A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평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해당 사

항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점, 신기술 환경에서도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기점을 받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평가 등급 향상은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개선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소화기 채담도 치료 전문성 강화 위해 최첨단 장비 도입

소화기내과, 저선량 고화질 영상 기반 최신 투시조영장비(ERCP)장비로 교체

전북대학교병원이 소화기질환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ERCP(내시경 역행 담관 조영술)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용 검사실도 새로 갖췄다고 28일 밝혔다.

ERCP는 담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시술로 꼽힌다.

이번에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에 교체 도입된 ERCP 장비는 내시경과 X-레이를 이용해 채관 및 담관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명하고 빠른 영상 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 결석, 협착, 종양 등 다양한 채담도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최첨단 ERCP 장비 도입과 함께 전용 검사실

을 마련하여 내시경적 담도 스텐트 삽입술, 담석 제거술, 채관염 및 담도암 진단 등 고난도 시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ERCP의 저선량 시스템을 적용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고화질 영상 기술을 통해 채담도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조기 진단 및 치료 성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기내과 김성훈 교수는 "최신 ERCP 장비 도입으로 환자 안전성과 검사 정확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화기질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특사경, 다중이용 음식점 위생단속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가족 단위 도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식당 등 다중이용 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가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아채·과일류, 외피가 있는 식품 등은 재사용 가능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정의 달에는 가족 모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